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3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2023 - 100

나. 발 의 자: 최세진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9. 8.)

2. 제안이유

지난 2월 미 국방부의 동해상 한·미·일 군사훈련 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차원에서 동해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주권 수호 차원에서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 대한 우려를 포함과 아울러 향후 국제 사회에서 ‘동해’가 공식 용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3. 발송처

대통령실(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방

부장관, 외교부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전국 지방의회의장

4. 검토의견

가. 결의안의 제안 취지

-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수호라는 의도에서 제안된 결의안으로서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과 아울러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해역의 명칭에 대한 분란을 조속히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나. 검토의견

- 지난 2월 한·미·일 군사훈련에 있어 미 국방부에서는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대해 미 국방부에서는 ‘동해’의 공식 표기를 향후 ‘일본해’로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한편, 지난 2023.8.17.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을 통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왔다”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훈련해역’표기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한 바 있음.
(출처 : 조선비즈, 2023.08.17. 국방부, 美 ‘일본해’ 표기 논란에 “긴밀히 협의할 것”)

- 영토주권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지향과 함께 한·미·일 군사훈련의 주체인 국방부의 입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결의안의 채택을 통해 국방부의 향후 협의 과정에 동참함과 아울러 ‘동해’의 해역 표기 관련 사안은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사항으로서 결의안을 통한 우리 의회의 명확한 의사의 전달은 적절하다고 판단됨.